

Asan Report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저자

김지윤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장 및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표집틀 설정과 표본수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조사연구, 2011),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충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의철

이의철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아산 데일리 폴'과 '아산 연례조사' 등 여론조사 실무와 분석을 맡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여론조사, 국내정치, 선거연구 등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칼 프리드호프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위튼버그 대학교(Wittenberg University)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계경제연구원(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에서 연구원을 거쳤고, 코리아헤럴드와 중앙일보 등의 매체에 기사를 기고하고 있다.

요약

한일 양국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전 세계를 순방하며,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지만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아직도 요원하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팽창,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올해에도 동북아 정세는 더욱 격랑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격하게 냉각된 한일관계로 한국인의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2013년 한해 일본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지난 1월에는 최근 1년 사이 최저치(2.38점/0-10점)를 기록했다. 일본 호감도 하락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일본 호감도의 세대간 격차는 지난해부터 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20-30대에 비해 40대 이상에서의 호감도 하락이 뚜렷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말 단행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후로 나타난 일본 호감도 하락에서도 40대 이상의 하락폭이 컸다.

주변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경화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도 악화되었다. 지난해부터 미국 오바마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에 비해 낮았던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1월 하락세를 지속하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0.99점/0-10점)과 같아졌다.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 변화에서 특징적인 점은 일본 호감도와 달리, 20대의 하락세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악화된 한일관계의 원인을 아베 총리와 같은 일본 정치인의 잘못으로 보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한일간 과거사 갈등으로 최근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달고 있음에도,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군사·안보협력에 지지를 보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 포함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통해 지역 내 안보역할을 강화하려 하고 있음에도, 한국인은 한일군사·안보협력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인은 최근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곱게만 보지 않았다(부정적: 66.8%). 이는 다수의 한국인이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봤기 때문이었다.

한국인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안보역할 확대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동북아 질서유지를 위한 한일간 군사·안보협력을 지지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직후에도 한국인 2명 중 1명(50.7%)은 2012년 최종 서명을 앞두고 결렬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본 아베 총리의 급작스런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한국 내 정상회담의 효용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이 다소 늘었지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도 절반(49.5%)에 가까웠다.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한국인(57.8%)이 동의했다. 이때 한일관계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에 동의한 한국인 중 다수(65.4%)는 한일정상회담을 지지하며,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가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봤다.

한국인은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해 비호감을 보이면서도, 일본과의 군사·안보협력을 지지했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동북아에서 또 다른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

을 가정했을 때 한국인 중 다수(63.9%)는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우려하는 한국인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즉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 중에서도 다수가 한일안보협력(61.5%)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불편하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한국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일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볼수록 한일관계 개선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동북아 내 중국의 부상이 한국인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첨예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동안 과거사 문제는 일본의 무관심과 한국의 민감한 대응으로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그렇지만, 한국인은 한일관계 발전에 있어 독도 영유권(42.1%)을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역사 교과서 왜곡(32.9%), 종군 위안부 사과 및 배상(13.8%)은 최근 과거사 인식 논란이나 언론·정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지 못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한국인이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49.5%)로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 향후 독도 영유권 문제는 현재 용일(用日)의 관점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국인의 목소리마저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양국의 인식 공유와 이슈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전략의 중심에 있는 동맹국, 한일 양국 사이 갈등이 커지는 것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아베 정권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가 지속될 경우에 미국이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악화된 한일관계와 달리, 한중관계는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 한데 이어, 올해에도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이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남아있지만, 일본이 지속적인 과거사 도발로 '공공의 적'이 되면서 다수의 한국인(74.5%)은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보기도 했다.

향후 박근혜 정부에게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공조,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수의 한국인이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공조해야 할 상대를 고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들어가며

1.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1) 폭락한 일본 호감도
- (2) 일본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 (3) 악화된 아베 호감도

2. 두 얼굴의 일본: 불편한 이웃과 전략적 파트너

- (1) 일본발 안보불안
- (2) 한일군사·안보협력과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

3. 한일관계의 변수: 중국

4. 한일관계의 장애물

나가며: 동북아 정세와 한일관계

부록

그림

[그림 1] 국가 호감도

[그림 2] 세대별 일본 호감도

[그림 3] 세대별 일본 호감도 변화

[그림 4] 아베 총리 신사 참배 이후 세대별 일본 호감도 변화

[그림 5] 일본 호감도와 아베 총리 호감도 비교

[그림 6] 최근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

[그림 7] 현재·미래 일본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그림 8]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그림 9]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그림 10]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역할

[그림 11] 중국 부상 고려시 한일안보협력 필요성

[그림 12] 한일관계 장애물

표

[표 1] 국가수장 호감도

[표 2]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과 한일정상회담

[표 3]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와 한일간 군사·안보협력 필요성

[표 4] 중국 부상시 한일안보협력 필요성과 한일관계 인식

[표 5] 한일관계 인식과 한일관계 장애물

[표 6]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한국인이 본 한일관계 장애물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

들어가며

2013년 12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내각 출범 1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아베 총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일 외교 당국이 추진하던 차관급 전략대화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1월 10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 관계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말하며, 향후 양국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서울과 도쿄를 잇는 외교라인은 다시금 경색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 역시 매우 부정적이었다.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직후에 실시한 아산데일리폴 조사결과를 보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잘못됐다고 본 응답자의 비율이 87.6%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번 사건을 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문제는 2008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7년 만에 단행된 현직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파장이 거대하다는 점이다. 악화 일로를 걸으며 더는 떨어질 곳이 없던 것으로 보였던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의 골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한층 깊어졌다. 한일관계를 나쁘다고 본 한국인의 비율은 2013년 9월 아산데일리폴 조사에서 80.3%였으나, 12월 조사에서는 86.9%로 증가했다.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 역시 2013년 내내 하락하며, 2014년 1월에는 최근 일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향후 한일관계 전망을 물어본 결과에서도 55.7%의 국민이 향후 한일관계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답하며, 다수의 한국인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좋아질 것 30.3%).

비단 반일감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양국 외교라인 경색과 함께 일본인의 반한 감정도 커지고 있다. 2013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다수인 72%의 일본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다고 답했다. 일본 내 각종 혐한(嫌韓) 기류와 반한 시위 역시 늘어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원유철 의원이 2013년 10월 3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일본 주재 한국 공관 부근의 반한 시위가 2009년 30건에서 2012년 301건으로 3년 사이 10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에서는 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반한 감정이 날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일 갈등이 정계를 넘어 민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한국인은 일본에 비호감을 보이면서도, 안보협력에 있어 일본을 중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과반이 넘는 한국인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봤고, 한

일정상회담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도 지지를 보냈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북한의 도발,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의한 불안 요소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해소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인은 향후 한일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독도 문제를 손꼽았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은 독도 문제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이 독도에 대해 강경입장을 지속한다면, 일본에 우호적인 한국인의 비율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다수의 한국인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역사인식 대응과 안보협력의 두 트랙 정책 기조를 지지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현실적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수의 한국인은 독도, 위안부 사과 및 보상, 역사 왜곡 등을 둘러싼 한일간 마찰과 한일간 군사·안보협력을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일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 한일간 역사 갈등 구조에 의해 제한적이었던 대일정책에서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일본 아베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자극적인 행보를 삼가고,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하며, 미국에게는 한국인의 역사적 감정을 고려한 섬세한 외교적 수사와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1.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폭락한 일본 호감도

먼저 주변국 호감도 평가를 통해 한국인이 느끼는 일본에 대한 감정을 살펴봤다. 주변국 호감도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4개국을 대상으로 했고, 0점('전혀 호감이 없다')부터 10점('매우 호감이 있다')까지의 11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시기별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아산연례조사 자료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아산데일리폴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다.¹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2010년에 4.24점, 2011년에는 3.36점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2.71점이었다. 우리 국민의 일본 호감도는 최근 수 년간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 역사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 일본 정계의 독도 영유권 주장, 종군 위안부(성노예) 관련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며 전반적인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했다.

2013년 들어 우리 국민의 일본 호감도는 1월 3.31점으로 2012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1월 이후, 일본 호감도는 서서히 하락했다. 2013년 1월 3.31점이었던 일본 호감도는 1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며, 2014년 1월에는 1년 전에 비해 0.93점 하락한 2.38점으로 나타났다. '전혀 호감이 없다'를 의미하는 0점에 더욱 가까워졌다.

¹ 2013년 아산데일리폴의 주변국 호감도 평가는 2월과 3월을 제외한 매월 초에 이뤄졌다.

1년 동안 나타난 일본 호감도 변화 양상은 같은 호감도 조사 대상이었던 미국, 중국, 북한의 호감도 변화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거의 1점에 가까운 0.93점이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내내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 잦은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한껏 가중시킨 북한의 호감도 하락(0.85점)보다 더 큰 수치였다. 같은 기간 미국 호감도가 0.16점 하락하고, 중국 호감도가 0.14점 상승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일본 호감도의 감소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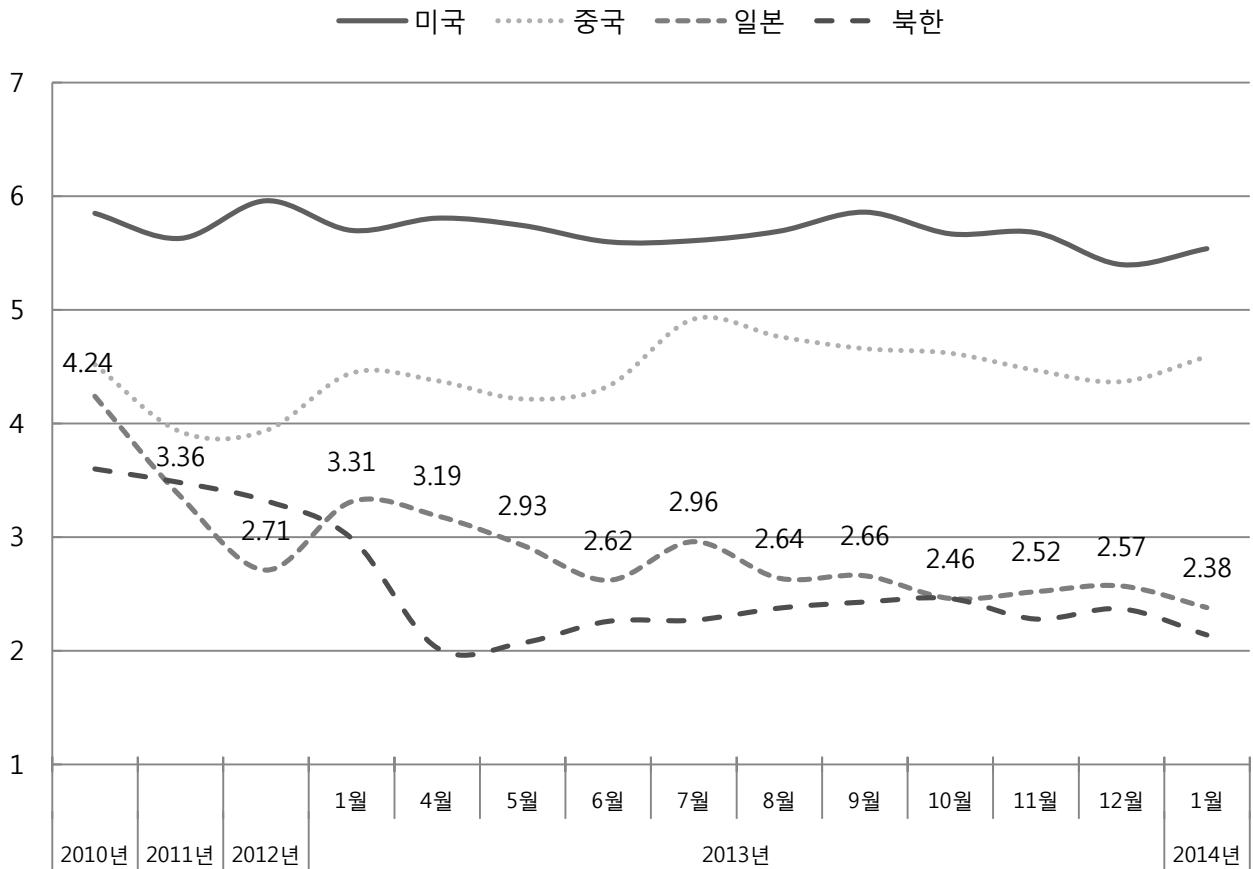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1]을 보면, 일본 호감도가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일본 호감도 하락의 모양새는 북한 호감도 하락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3차 핵실험을 계기로 1월 조사에 비해 4월 조사에서 호감도가 0.96점 급락한 북한 호감도와 달리, 일본 호감도는 매 월 약 0.1점에서 0.3점 사이로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일 관계에 있어 민감한 이슈인 역사인식 문제, 독도 문제, 종군 위안부(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지난해 내내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²

이중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난해 2월 시마네현에서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및 일본 외무대신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건, 4월의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주권 명기 포함 사건 및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및 일본 의원 168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건, 5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망언 논란, 7월 아소 다로 부총리 나치식 개헌 망언, 9월 아베 총리가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강연 중 “군국주의자로 불려도 좋다”는 발언 등이 있다. 이외에도 독도, 위안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다수의 논란이 있었다.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한해 동안 지속되며,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는 하락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아베 총리의 전격적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은 1년 만에 우리 국민의 일본 호감도를 최하점으로 떨어지게 만든 계기가 됐다. 지난해 10월 2.46점으로 가장 낮아진 후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것으로 보였던 일본 호감도가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로 인해 다시 한 번 최저점을 갱신했다.

² 한일간에 있었던 갈등 상황을 정리한 부록의 한일관계 주요이슈 목록표를 보면, 거의 매월 일본 정치인의 망언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가 호감도 (11점 척도, 0-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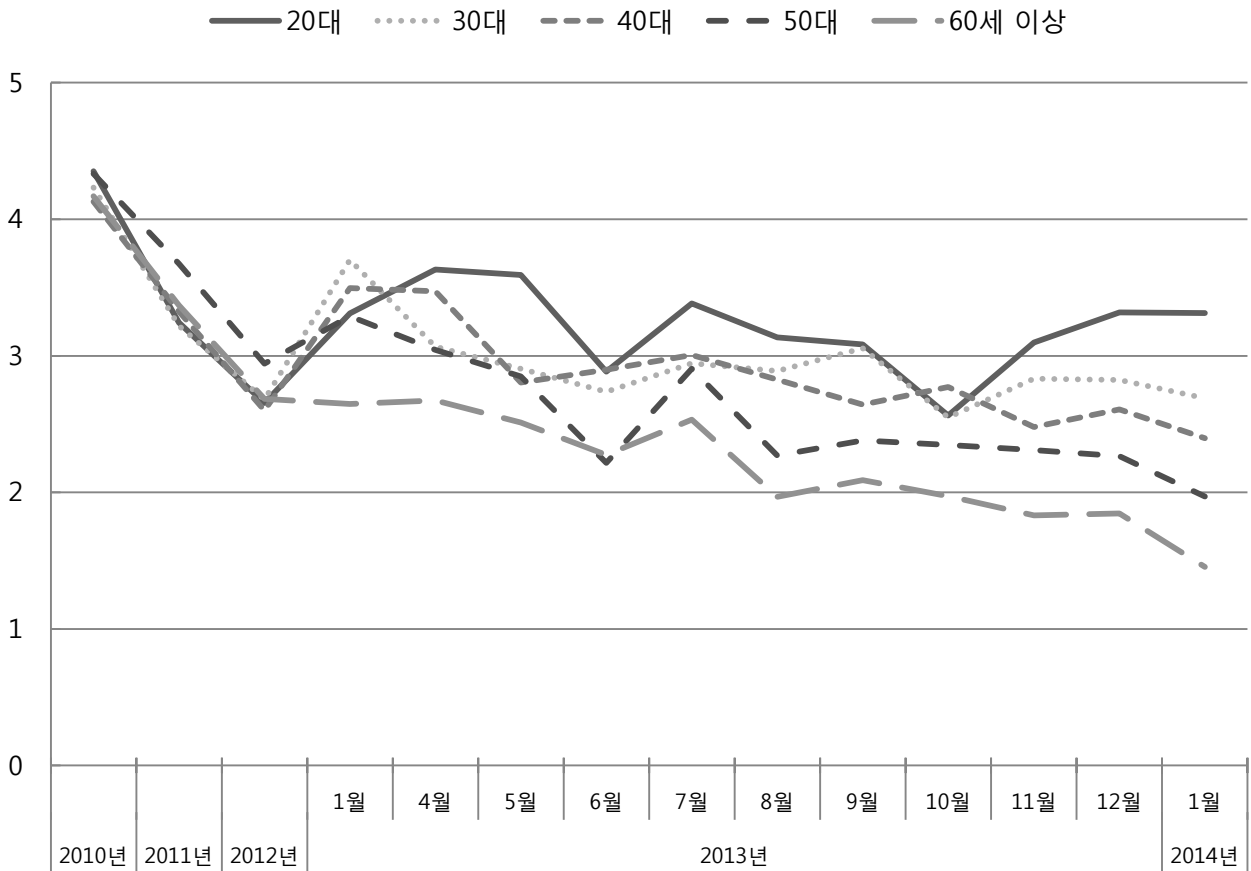
일본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일본 호감도는 세대별 격차를 보였다.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일본 호감도가 더 낮았고, 호감도 하락폭이 컸다.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로 인한 일본 호감도 하락은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 하락이 크지 않았다.

2010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세대별 일본 호감도 평균은 20대 3.25점, 30대 3.02점, 40대 2.96점, 50대 2.77점, 60세 이상 2.43점으로 20대에서 60세 이상으로 갈수록 호감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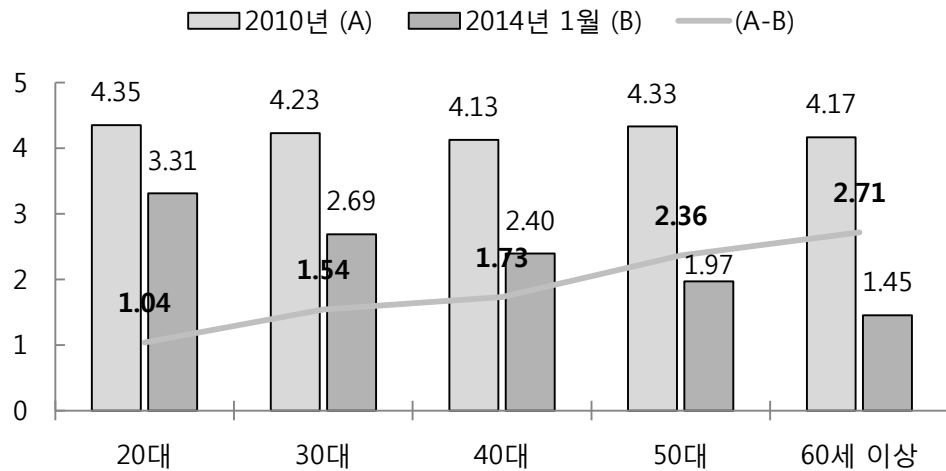
[그림 2]를 보면, 이러한 연령대별 일본 호감도 차이가 2013년 이후에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연례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에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인 세대와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인 세대의 점수 편차가 2010년 .022점, 2011년 0.46점, 2012년 0.34점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 호감도 최소, 최대값의 편차는 1점 이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고, 2013년 11월에는 1.27점, 12월 1.47점, 2014년 1월에는 무려 1.86점으로 커지고 있었다. 최근 들어 세대간 일본 호감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림 2. 세대별 일본 호감도 (11점 척도, 0-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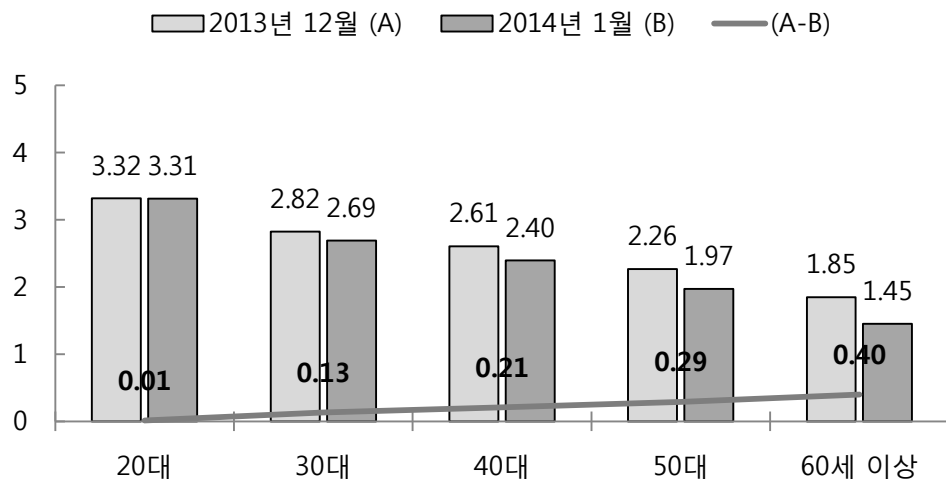
2010년과 2014년 1월 각 세대별 호감도 변화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 연령대에서 일본 호감도가 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 폭은 각기 달랐다. 역시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호감도 하락폭이 훨씬 컸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아산연례조사에서는, 20대에서 60세 이상 세대의 일본 호감도는 전부 4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 1월에는 고연령층인 60세 이상과 50대는 일본 호감도가 2점 이상 하락했고, 30대와 40대는 1점 중반 정도 호감도가 하락했다. 일본 호감도 하락이 가장 낮았던 20대의 경우, 1.04점만이 하락했다.

그림 3. 세대별 일본 호감도 변화 (11점 척도, 0-10점)



아베 신조 총리의 신사 참배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도 이와 유사했다.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각 세대별 일본 호감도에 준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신사 참배가 있기 전인 12월 초의 호감도 조사결과와 참배 직후인 1월 초의 결과를 비교했다. 20대의 경우,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에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30대는 이보다는 큰 0.13점의 호감도 하락이 있었지만, 4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중장년층 이상 세대의 경우, 40대 0.21점, 50대 0.29점, 60세 이상 0.4점의 호감도 하락이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저연령층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림 4. 아베 총리 신사 참배 이후 세대별 일본 호감도 변화 (11점 척도, 0-10점)



악화된 아베 호감도

그렇다면,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어떻게 변했을까? 2013년 7월과 11월, 2014년 1월 총 3회에 걸쳐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5개국 국가 수장 호감도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

했다.³ 국가 호감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혀 호감이 없다'는 응답의 0점부터 '매우 호감이 있다'는 10점까지 사이에서 응답자에게 각국 수장에 대한 호감도 점수를 매기게 했다. 그 결과,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올해 1월에는 1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총리 호감도는 1.65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5개국의 수장 중 4번째였다. 한국인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5점 이상의 호감을 보였다. 반면, 일본 아베 총리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전혀 호감이 없다'를 의미하는 0점에 근접한 1점대의 호감도를 보였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4점대로 보통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미 한일관계가 경색되어 있던 지난해 여름,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는 최저수준이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아베 총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 수장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월 조사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0.99점이었다. 2013년 7월과 비교하여 0.66점 하락했다.

아베 총리의 호감도 하락은 20대와 60세 이상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 7월에 비해 올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20대의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0.79점 하락한 1.21점, 60세 이상의 호감도는 1.18점 하락한 0.6점이었다. 다른 세대의 경우, 최소 0.39점에서 최대 0.53점 하락하여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30대 0.93점, 40대 1.10점, 50대 1.08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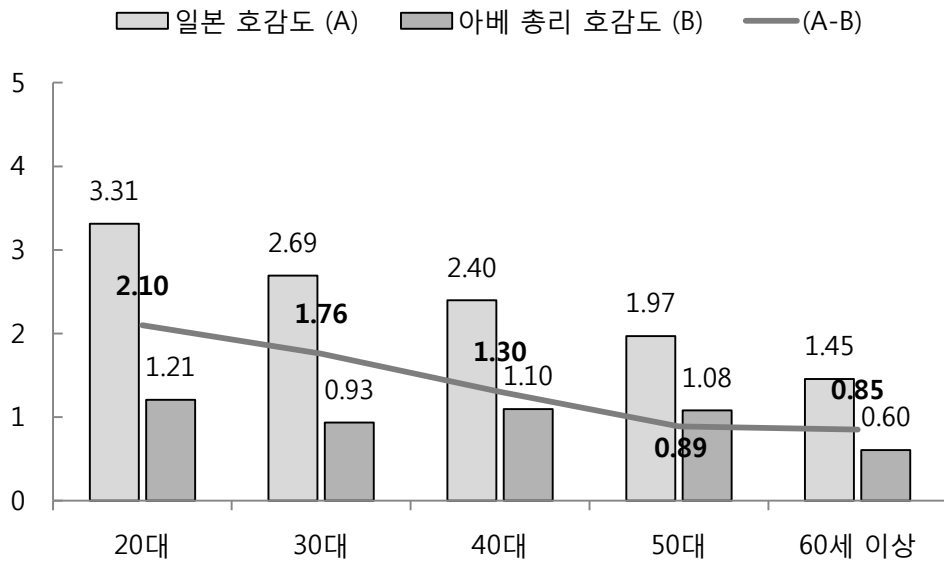
표 1. 국가수장 호감도 (11점 척도, 0-10점)

구분	2013 년		2014 년
	7 월	11 월	1 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6.29	6.25	6.21
중국 시진핑 주석	5.35	5.31	4.55
러시아 푸틴 대통령	4.08	4.87	4.14
일본 아베 총리	1.65	1.43	0.99
북한 김정은 위원장	1.14	1.19	0.99

전반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하락폭이 적었던 20대의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눈 여겨 볼 만 하다. 20대의 일본 호감도가 3점대(3.31점)였던 것과 달리,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60세 이상(0.6점)의 고연령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1점대 초반(1.21점)이었다. 젊은층일수록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일본 국민이나 일본이라는 국가와의 문제라기보다 일본 정치인의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³ 아산데일리폴 조사자료 (조사기간: 2013년 7월 10일~12일, 11월 17일~19일, 2014년 1월 1일~3일)

그림 5. 일본 호감도와 아베 총리 호감도 비교 (11점 척도, 0-10점)



2. 두 얼굴의 일본: 불편한 이웃과 전략적 파트너

이처럼 한일간의 역사 갈등이 심화되며, 최근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역할 강화 움직임도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됐다. 한국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함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구 역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한일관계에 대한 진단은 냉정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한일간 군사·안보협력은 지지하는 편이었다.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한일관계는 올해에도 그 전망이 어둡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정서가 더욱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한국인이 한일간 군사·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간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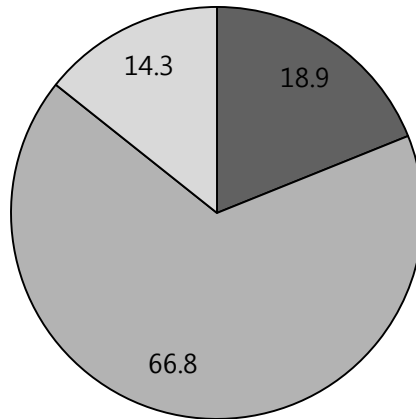
일본발 안보불안

이번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격렬한 반감을 보인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비판만을 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안보에 있어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지지하며, 최근 들어 두 국가가 부쩍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쉽게 아베 총리의 행동을 규탄하고 나설 수 없었던 까닭이다. 일본의 자위권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다분히 중국 견제용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지지를 업고, 연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의해 일본의 군사화가 허용되는 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66.8%의 한국인은 최근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는 상당수 한국인이 일본을 안보 위협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인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로 중국(47.3%)과 일본(38.4%)을 꼽았다.⁴

그림 6. 최근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 (%)

■ 긍정적 ■ 부정적 □ 모름/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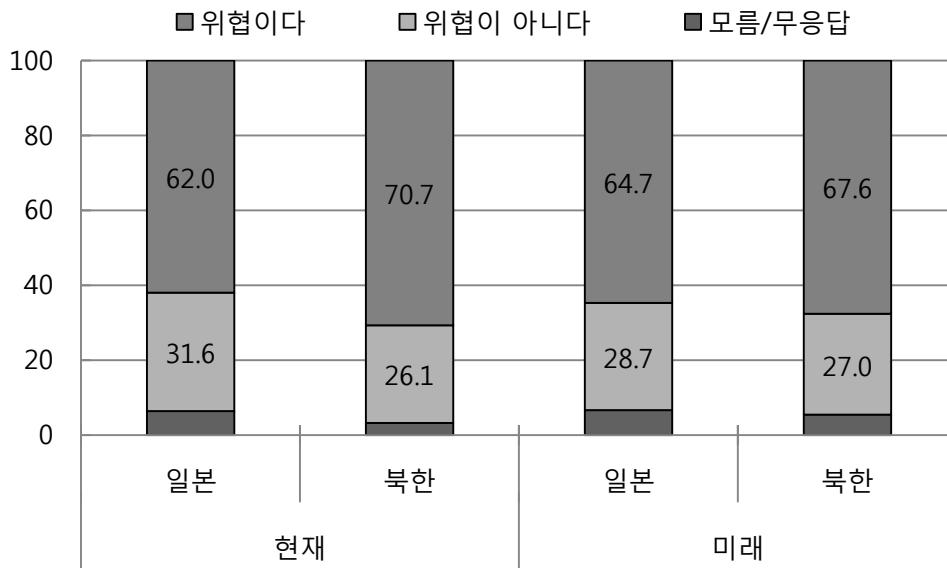


한국인의 일본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은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아산데일리풀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일본으로부터 느끼는 군사적 위협은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의견은 62.0%로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의견(70.7%)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향후 일본을 우리나라에 군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본 의견(64.7%)과 북한을 미래의 군사적 위협으로 본 의견의 비율(67.6%)이 오차범위 내의 차이만을 보였다는 점이다.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인이 직접적 군사도발로 우리나라를 위협해 온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을 유사한 수준으로 위협이 될 것으로 본 것은 주목할만하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우경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 정치권에 대한 우려가 한국인 사이에서도 높았던 점(76.4%)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⁵ 결국, 한국인은 일본의 역사 도발뿐만 아니라 군사적 재무장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⁴ 2013 아산연례조사

⁵ 아산데일리풀 조사자료 (조사기간: 8월 30일~9월 1일)

그림 7. 현재·미래 일본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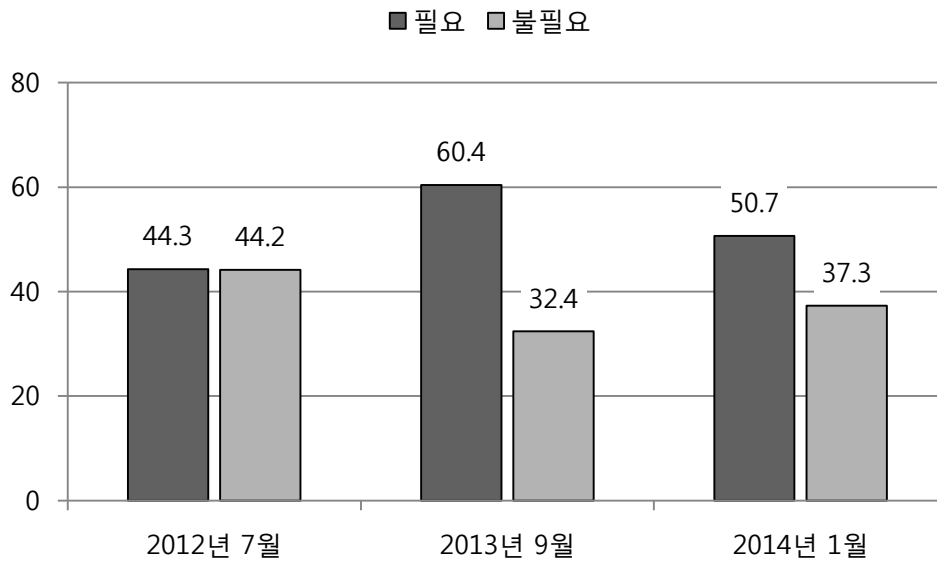
한일군사·안보협력과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

한국인 사이에 일본을 안보차원의 위협으로 보는 시각은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을 적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인은 한일간 군사·안보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독자적 군사대국화에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한 한일간 군사·안보협력은 지지했다. 또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고, 양국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한국인도 과반에 이르렀다.

2012 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이 결렬된 직후, 한국인의 44.3%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⁶ 이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8 월 60.4%까지 증가했고,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직후에 이루어진 12 월 조사에서도 50.7%로 과반을 넘었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비호감과 일본과의 군사협력 필요성을 별개로 여겼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다수의 한국인이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도 지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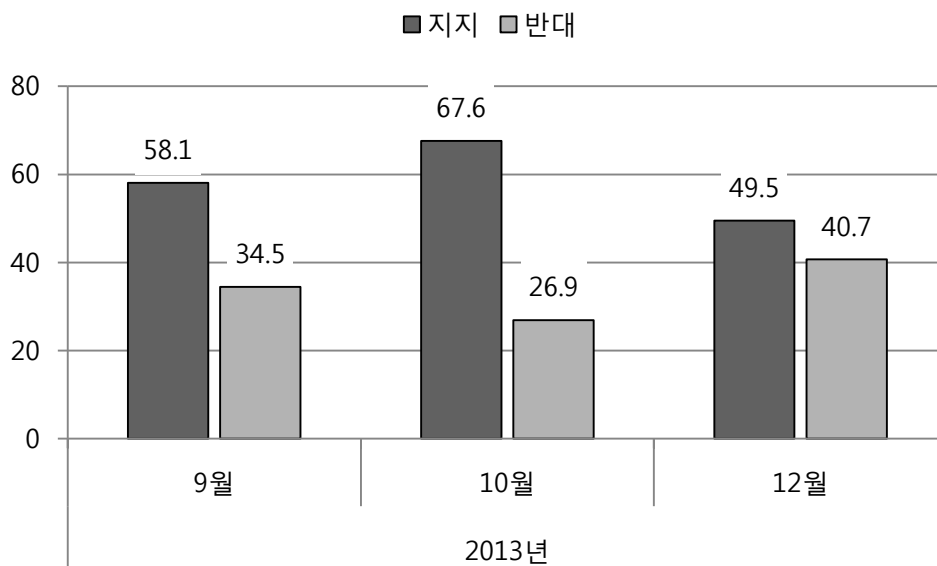
⁶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7월 협정체결을 위한 서명을 한 시간 앞두고, 우리 측의 일방적 요청으로 협정이 결렬됐다. 아산데일리풀 조사자료 (조사기간: 2012년 7월 13일~15일, 2013년 8월 30일~9월 1일, 2014년 1월 1일~3일)

그림 8.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한국인의 의견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8월 58.1%로 과반이상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던 10월에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지지가 67.6%로 더 상승했다. 이후 12월말에는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한일정상회담의 필요성에 회의를 느낀 한국인이 증가했지만, 한국인 2명 중 1명(49.5%)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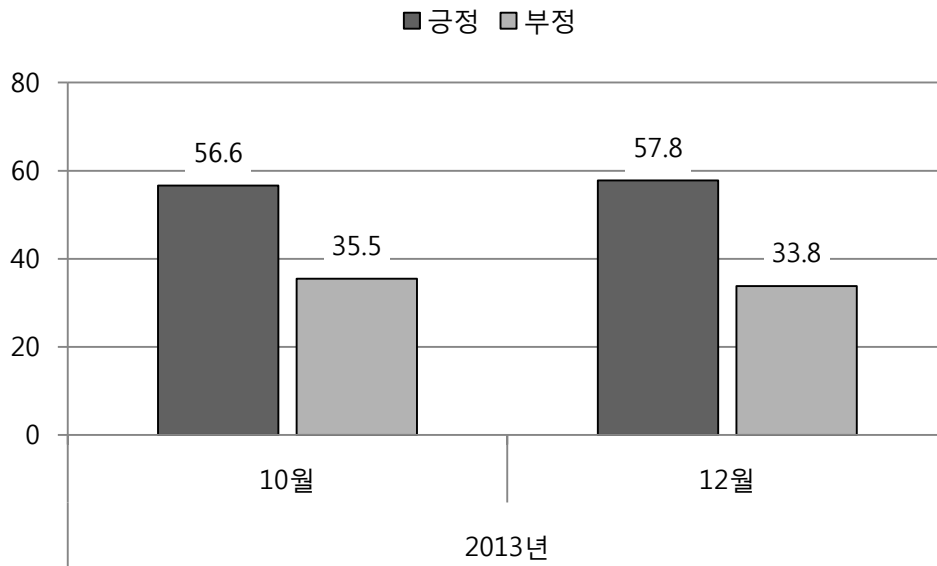
그림 9.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



⁷ 아산데일리폴 조사자료 (조사기간: 2013년 8월 30일~9월 1일, 10월 21일~23일, 12월 29일~31일)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 역시 높았다.⁸ 흥미로운 점은 정상회담의 경우에 10월과 비교했을 때 12월에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었으나,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57.8%)는 주장은 10월(56.6%)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일관계의 구체적 맥락 변화와 관계없이, 다수의 한국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었다.

그림 10.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 (%)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에 대한 입장은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랐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 응답자의 65.4%는 한일정상회담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론에 동의한 한국인 중 다수는 한일정상회담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여기고 있었다.

표 2.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과 한일 정상회담 (%)

항목	구분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	
		긍정	부정
한일 정상회담	지지	65.4	26.3
	반대	25.8	71.3

종합해보면,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감정과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서 발견된 이중성은 한일안보협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한일협력, 또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에 상응하는 정책 제안을 해올 경우, 복잡하게 꼬여있는 한일관계가 오히려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 격랑을 겪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간 협력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 과거사 도발 등에

⁸ 아산데일리폴 조사자료 (조사기간: 2013년 10월 21일~23일, 12월 29일~31일)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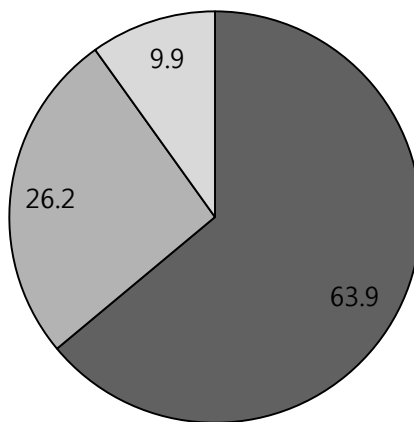
3. 한일관계의 변수: 중국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도 한국인은 일본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정상회담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가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한국인은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실마리를 찾길 바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랐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 동의한 한국인도 50.7%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다층적 태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동북아 안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웃,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을 가정했을 때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3.9%의 한국인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6.2%에 불과했다. 다수의 한국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간 안보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그림 11. 중국 부상 고려시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 (%)

■ 필요 □ 불필요 □ 모름/무응답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긍정적으로 본 한국인 중 다수는 한일간 군사·안보협력에 지지를 보냈다([표 3]). 그러나 한일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부정적으로 본 한국인 사이에서도 꽤 높았던 것은 주목할만하다. 실제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 중 다수(61.5%)는 중국의 부상을 고려한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⁹ 일본의 안보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불편하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간 군사·안보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은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 중에 대다수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절반(48.4%)에 가까웠다.

표 3.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와 한일간 군사·안보협력 필요성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	
		긍정적	부정적
한일안보협력	필요	77.2	61.5
	불필요	14.8	32.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	66.0	48.4
	불필요	26.1	43.8

더불어 2013 년 9 월에 실시된 아산연례조사에서는 중국의 부상시 한일간 군사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44.9%였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된 지난해 12 월 아산데일리폴 조사에서는 중국이 계속 부상한다면 한일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63.9%로 증가했다.¹⁰ 아산연례조사의 문항이 한일군사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산데일리폴 문항의 질문 워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불과 3 개월 사이 한일간 안보차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가량 늘었다는 점은 여전히 눈여겨볼만하다.

‘중국의 부상’이 갖는 의미는 아래 [표 4]에 제시된 중국의 부상시 한일안보협력 필요성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 한일정상회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간의 교차분석 결과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국의 부상시 한일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측은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과,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중국의 부상에도 한일안보협력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취한 응답자의 경우 세 문항 모두에 부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

먼저 중국 부상시 한일안보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론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의 부상시 한일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의 65.2%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부상에도 한일안보협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에 대한 의견이 양분됐다. 또 한일정상회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중국의 부상시 한일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 중 다수인 57.7%, 66.0%가 각각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중국의 부상에도 한일안보협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의 경우,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0.3%, 75.1%로 다수였다.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여, 한일간 안보협력에 동의한 응답자일수록 한일관계 개선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종합해봤을 때, 한국인에게 있어 한일관계와 동북아 지역 내 중국의 부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¹⁰ 2013 년 아산연례조사에서 한일군사동맹의 필요성을 물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중국 부상시 한일안보협력 필요성과 한일관계 인식

항목	구분	중국 부상시 한일안보협력	
		필요	불필요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	긍정	65.2	45.0
	부정	29.4	49.6
한일 정상회담	지지	57.7	35.1
	반대	35.4	60.3
한일 군사정보협정	필요	66.0	20.3
	불필요	25.0	75.1

4. 한일관계의 장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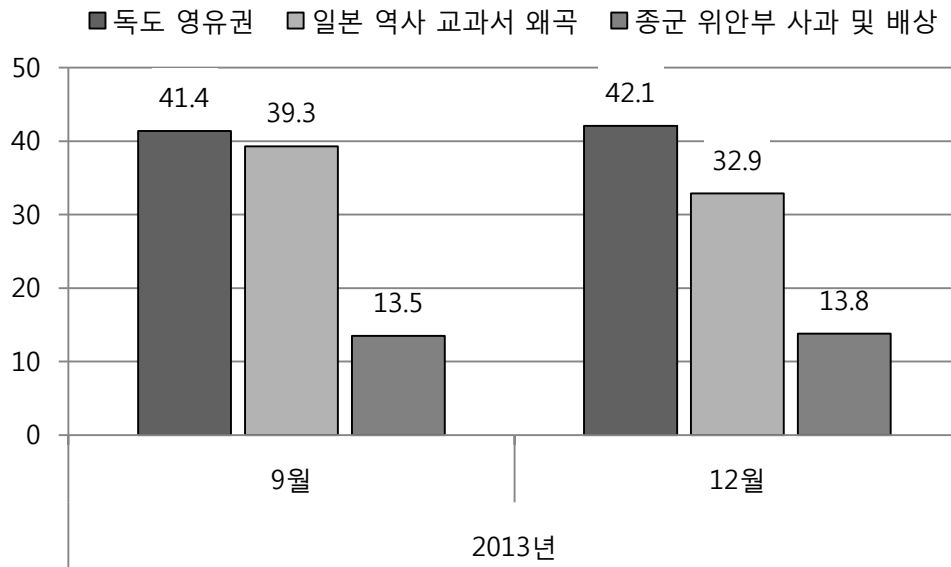
한일 양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 교과서 논란, 위안부 사과 및 보상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해 왔다. 한일간 역사 마찰의 배경에는 역사인식의 차이, 전후 처리 갈등, 과거사 반성에 대한 논란 등이 있다. 여기에 일본의 무관심과 한국의 민감한 대응이 반복되며 갈등 국면은 더욱 심화됐다. 과거사 문제나 독도 관련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인의 대 일본 정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나 과거사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또 일본 우익단체나 보수 매체는 자국 내 보수세력의 확장과 결집을 위해 과거사 갈등이나 독도 영유권 마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한국 역시,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포퓰리즘에 기대어 대응해 왔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역사 마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치권과 언론도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있을 때마다, 경쟁적으로 민족주의적 입장을 견지한 채 강경 대응을 일삼았다. 이렇게 증폭된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구조는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 유연성을 제한하며, 한일관계를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무엇을 한일관계 발전에 있어 장애물로 보고 있을까? 지난해 두 차례의 아산데일리폴 조사결과에 따르면, 40%를 상회하는 한국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했다.¹¹ 지난해 내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일었지만, 한국인의 다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관계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봤다. 한국인은 독도 문제 다음으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문제시했다. 언론과 정계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위안부 사과 및 배상 문제를 한일관계 발전의 저해 요소로 보는 비율은 10% 초반으로 나타났다.

¹¹ 아산데일리폴 조사자료 (조사기간: 2013년 8월 30일~9월 1일, 12월 29일~31일)

그림 12. 한일관계 장애물 (%)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한일관계 발전의 저해 요소에 대한 시각을 달리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유화적일수록 독도 문제를 최대 장애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수록 역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다수인 44.7%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관계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답했다.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라는 입장을 지닌 응답자는 32.4%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한일관계 발전의 장애물로 본 비율은 39.2%,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라는 비율은 38.0%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차에 따른 한일관계 장애물 인식은 더욱 차이가 났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본 집단에서는 독도 영유권이 한일간 가장 큰 문제라는 입장이 46.0%, 역사 교과서 왜곡이 문제라는 입장은 30.4%였다. 반면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집단에서는 한일간 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다수인 41.2%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손꼽았다. 독도 문제를 장애물로 선택한 비율은 37.4%였다.¹²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 역할론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국민을 상대적인 친일본적 성향과 반일본적 성향으로 나눠봤을 때,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에서 독도 문제를 가장 중요시 한 점은 흥미롭다. 또 한일관계 개선이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반일본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를 한일관계의 장애물로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한일관계를 역사 문제의 첨예한 대립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¹²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과 한일관계 장애물에 대한 의견을 교차분석한 결과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한일관계 인식과 한일관계 장애물 (%)

항목	구분	박근혜 대통령 역할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정상회담	
		긍정	부정	필요	불필요	지지	반대
한일관계 장애물	독도 영유권	44.7	39.2	46.0	37.4	43.7	42.3
	역사 교과서	32.4	38.0	30.4	41.2	33.8	35.6
	중군 위안부	14.4	14.5	15.0	13.1	14.6	13.8

다음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일본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가진 집단을 추려서, 이들이 생각하는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이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지지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부상시 한일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이다. 즉 이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전체 응답자 중 217 명이었다. 이들을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에서 실용적인 외교관계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간주했을 때, 이들에게 있어 양국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독도 영유권 문제였다. 49.5%(107 명)가 독도 영유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 답했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꼽은 비율은 절반 정도인 27.1%였다.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집단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역사 교과서 왜곡, 위안부 사과 및 보상 문제가 아닌 독도 영유권이었다. 결국, 향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간 마찰이 발생한다면 중군 위안부 망언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보다 큰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한국인에게 독도 영유권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진 만큼 최근의 정세 변화는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달 30 일 일본 아베 총리가 참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 단독으로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과 2 월 22 일 시마네 현 주최의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한일관계를 더욱 고착화시킨 셈이다. 이처럼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주변국의 압박을 무시한 일본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가 독도 영유권 갈등으로 번진다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 사이 마찰이 불거진다면, 그나마 전략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한국인의 목소리마저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표 6.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한국인이 본 한일관계 장애물

	중군 위안부	독도 영유권	역사 교과서	모름/무응답
사례수 (명)	38	107	59	13
비율 (%)	17.4	49.5	27.1	6.0

나가며: 동북아 정세와 한일관계

최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은 수십 년 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올해에도 지역맹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 아시아 회귀정책으로 맞서는 미국,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 사이 신경전으로 지역 내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러한 강대국 사이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강화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력 증대 움직임으로 인해 국내 반일 감정은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직후 실시된 아산데일리폴 결과에서는, 한국인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팽배해져 있음이 드러났다. 80%가 넘는 한국인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쁘다고 했으며, 우리 국민의 일본 호감도는 0-10점에 2점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용일(用日)에 대한 욕구 역시 드러났다. 일본 정부와 정치인이 내비치는 역사 인식, 독도 영유권 주장, 군국화 야욕은 싫지만, 역내 안보를 위한 일본과의 협력은 필요하다는 인식도 한국인 사이에서 나타났다. 양국 정상이나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 의견도 과반에 이르렀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 30여 차례가 넘는 정상회담을 수행했다. 이중에 일본은 없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내년까지도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에도 주변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엔 착수하는 한편, 연내에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완료하자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중국어명: 다오위다오)를 두고 군사 대치를 하고 있는 한편, 우리나라와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시비 가리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올해 초에는 2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3월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4월 야스쿠니 신사 봄 제사 등 한일관계에 있어 민감한 사건이 차례로 예정돼 있어 양국 관계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가 한일관계의 전면적 악화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 독도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접근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앞선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이는 독도 문제가 심화될 경우 일본에 상대적으로 친화적이며 용일(用日)의 태도를 지닌 집단마저 반일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독도 영유권과 같은 역사갈등으로 국민 감정이 악화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일본과 공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금과 같이 상호방기 속 외면하기를 지속할 경우, 그 여파는 미국에까지 미칠 전망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동북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답보상태에 빠진 한일관계가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최근 미국이 더 이상 아베 정권의 폭주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외교적 단절이 지속되고 있는 한일관계가 일본이 바뀌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문제라는데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향후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추진이 주변

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서두를 필요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비칠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역사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한일관계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정부 역시 한일 양국관계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미국으로서는 한일간 갈등이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실망과 나아가 한미관계 악화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4월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주요국 방문 일정에 한일 양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추후 한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에 대응할 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기존 동맹국 간의 공조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최근 일본이라는 공동의 꺼림직한 이웃의 부상으로 부쩍 가까워진 한중관계이다. 한국인은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경제·군사적으로 점차 거대해지는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말 실시된 아산데일리폴 결과를 보면, 대다수인 74.5%의 한국인이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¹³ 앞으로도 한중관계는 무리 없이 순항 할 전망이다. 2013년 이미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치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내 한국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추진이 중국 측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진행된 점은 향후 중국이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여부와 대비되어 논쟁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난해 말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과 같은 급작스런 군사적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우리 국민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안보 불안감을 느낄 여지가 충분하다. 최근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평화발전'을 기치로 더욱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펼칠 것을 천명하며, 중국과 영토분쟁에 있는 아시아 주변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점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인의 일본, 한일관계 인식은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1차원적이지 않았다. 다수의 한국인은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최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거나, 한국인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안보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면 한국인 사이에서 일본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시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만큼 양국 정부의 접근방식에 따라, 한일간 안보협력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 인사들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이나 독도에 대한 도발적 연사가 목소리가 잦아든다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의 길은 매우 험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실익을 얻는 것이 외교의 목적이라면 감정적 대결 없이 철저하게 실익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 요구되며, 위의 조사결과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탓에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미·일 공조,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지도 확고한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의 한국인이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

¹³ 아산데일리폴 조사자료 (조사기간: 2013년 12월 29일~31일)

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협력할 상대를 골라야 한다는 셈법을 적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사안에 따라 전략적 공조에 나서는 데 힘을 써야 하는 이유다.

부록

한일관계 주요 이슈: 독도, 위안부, 과거사

2013년

2월 5일 일본 내각관방 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독도 및 센카쿠 등 영토 문제 전담) 신설 (독)

2월 21일~23일 일본 아베 총리 워싱턴 방문 및 미일 정상회담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 내각부 정무관 파견 (독)

2월 28일 일본 외무대신 독도 영유권 주장 (독)

3월 9일 "국제적 집단 안전보장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게 좋다."

3월 11일 "우리는 유엔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자위대가) 처음부터 그런 책임(유엔군 참여)을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3월 12일 "(유엔군에 참가 않으면)평화를 지키기 위해 돈만 내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3월 27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독도 일본땅 주장 사회 교과서 증가) (과)

4월 5일 일본 정부,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 내용 포함->정부, 일본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 (독)

4월 21일 일본 부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

4월 23일 일본 의원 168명,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아베 총리, 국회에서 침략 부정 발언 (과)

4월 25일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초치, 일본 정계 역사인식 왜곡에 대한 유감 표명 (과)

4월 26일 외통위, 일본 신사참배 및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 (과)

4월 26일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 취소

5월 13일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위안부는 필요했다" 망언 (위)

5월 23일 일본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회원 3명 독도 방문해, "독도는 한국땅" 선언 (독)

7월 1일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지민당-공명당 연립여당 압승

7월 22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7월 29일 아소 다로 부총리, 나치식 개헌 망언 (과)

8월 1일 일본 내각부, 독도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 발표 (독)

8월 5일 외교부, 일본에 "아베 내각 관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안 돼" 경고 (과)

8월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한일 정상회담 제의

9월 6일 정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9월 8일, 일본 도쿄,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9월 25일 아베 총리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로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달라"(히드슨연구소 초청 강연)

(과)

9월 26일 아베 총리, 유엔총회 연설에서 적극적 평화주의 주장;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과)

10월 3일 미국, 일본에 대한 집단적자위권 지지 발표(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 회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합의)

10월 18일 일본 총무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

11월 7일 한중일, 차관보급회담

11월 26일 특정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

12월 4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출범

12월 6일 참의원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제정

12월 17일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및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결의; 정부,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독도, 영유권 분쟁지역) 비난 및 철회 촉구

12월 26일 아베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

12월 30일 외교통일위원회, '아베 야스쿠니 참배 규탄 결의안' 채택 (과)

2014년

1월 1일 일본 내각 총무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

1월 6일 아베 총리, 한·중 정상회담 희망; 박 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日 변화 있어야 정상회담'

1월 10일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 박근혜 대통령 규탄 망언 (과)

1월 13일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 가결 (과)

1월 14일 일본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 확인 (과/독)

1월 15일 미국 연방 하원, 국무장관의 위안부 결의안 독려 내용 통과 (위)

1월 16일 일본 우익단체, 미국 글렌데일 시정부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청서 전달 (위)

1월 18일 오바마,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에 서명 (위)

1월 19일 중국, 안중근 기념관 개관

1월 22일 아베 "독도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 검토, 준비" 발언 (독)

1월 24일 아베 총리, 정기국회 시정 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위한 헌법해석 변경 방침 표명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동해 병기 법안 통과

1월 25일 미국, 아베 총리에 신사참배 중단 약속 요구 (과)

1월 27일 모미이 가쓰토 일본 NHK 신임 회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도 있었다" 주장 (위)

1월 28일 일본 정부, 개정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 명시 (독)

한국 정부, 뱃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조치

1월 29일 美 조지아주 상원, '동해 병기'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2월 1일 美 하원 위원장 '소녀상' 참배; "역사 인정해야, 미국 내 위안부 소녀상 2곳 더 세우겠다" (위)

2월 3일 하쿠타 나오키 일본 NHK 경영위원, "난징대학살은 없었다" 주장 (과)

2월 5일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日에 한중과 관계개선 촉구

2월 6일 아베 '집단 자위권' 구체화, 3단계 수순 제시

2월 7일 美 버지니아 동해 병기법 통과, 주지사 서명시 7월 발효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다케이마의 날 행사 개최 예정 (독)

3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예정 (과/독)

4월 일본 외교청서 발표 예정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

7월 일본 방위백서 발표 예정

아산연례조사 조사개요

2010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2,0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 년 8 월 16 일~9 월 17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2,0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 년 8 월 26 일~10 월 4 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 년 9 월 24 일~11 월 1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 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5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 년 9 월 4 일~9 월 27 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아산데일리폴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남녀 1,000 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1.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